

# 문대통령, 문정인 ‘미군 철수’ 기고에 경고

## 靑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진화나서 한국당 “해명하라”...바른미래 “즉각 파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최근 외국 외교전문지 기고글을 두고 2일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등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 특보의 해임을 거론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학자로서의 개인 생각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특보의 기고와 관련,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관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무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제원 수석대변인

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조건이 북한 주장인 주한미군 철수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경남 지역 필승결의대회에서 “되지도 않은 북핵 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동하고,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간다”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문정인 특보를 향해 ‘김정은 특보냐’라고 몰아붙이며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

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라면서 가세했다.

민주당평화당도 문 특보 발언을 비판했지만 수위는 조절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으며 최경환 대변인은 “북미정상 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파장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문 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내부적으

로는 민감한 시기에 타진 문 특보의 돌발 발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의도적으로 대통령 특보의 개인 발언을 키울 시기가 아니다”며 민주당을 측면 지원했다.

이에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불붙은 민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 홍영표·노웅래 2파전 11일 선출...민생·개혁입법 협치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오는 11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을 주도, 국정 동력을 본래대로 올려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자리다. 여소야대 환경에서 야당과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 4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2일 현재 3선의 홍영표, 노웅래 의원이 각각 출마 의사를 밝혀 이들의 2파전으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노동전문가인 홍영표 의원은 국회의 원 입기 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장 을 맡아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친문(전문가인)’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1년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으나 우원식 현 원내대표에 패배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당과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통상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출마선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날 조기 출마 선언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을 한발 앞서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정례회와 함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평형수 역할을 통해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정파를 초월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야 세력을 포함한 ‘한반도평화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여 “방탄국회 안돼” vs 야 “특검 수용”...5월 국회도 공회전

## ‘판문점 선언’ 등 대치전선 확대

## ‘선거 출마의원 처리’ 계획 여지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됐으나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 공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민선 국회’의 핵심 원인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번 5월 국회를 한국당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있어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인준 동의를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 등으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날 소집된 5월 국회의 문은 사실상 굳게 닫혀있는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 산안, 국민투표법,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면 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라며 “국회를 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조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협상 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 산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평화당은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과 함께 한국당의 방탄 국회 철폐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방탄 국회를 접고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다시 소집,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방탄 국회 말고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5월 국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각종 현안이 산

적한데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보궐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 국회를 새로 소집하거나 이미 소집된 5월 국회의 회기를 절반(15일) 정도로 줄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돌아온 손학규

## 바른미래 선대위원장 수락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6·13 지방선거 바른정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내가) 이를 전(30일) 박주선 공동대표와 (함께) 손 전 대표를 만나서 바른미래당의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는 부탁 말씀 드렸고, 어



제 손 전 대표님께서 수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내일(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책회의의 끝나고 손 선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다”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선대위원장이 되신 손 전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혁신교육감 경선투표 돌입

## 오늘까지 모바일·4~5일 현장투표...5일 밤 결과 발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추진하는 광주혁신교육감 경선투표가 2일 온라인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경선에는 정희근(65·전 광주시의원), 최영태(64·전남대 교수) 예비후보가 참여했으며, 경선 발표는 5일 밤 발표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사전 신청한 1만 8000명의 시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3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며, 현장투표는 4~5일 광주 금남로 YMCA회관 2층 백제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경선 승리자는 시민선거인단 투표와 지난달 27~28일 진행

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0명) 결과를 5대 5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경선에 참여한 정희근·최영태 예비 후보 중 승자는 오는 6·13 지방선거 광주혁신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국(68) 현 교육감과 이정선(59·전 광주교대총장) 후보와 다투게 된다.

‘추진위’는 광주YMCA, 광주경실련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현장투표 교육감은 참여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고, 이정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 룰 협의 과정에서 이탈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